
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추진현황

2018. 9. 3

금융위원회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기존 벤처·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평가	3
III.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추진현황	4
1.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지속	5
2. 혁신기업의 성장(Scale-up) 지원체계 마련	11
3. 회수시장 자금순환의 역동성 제고	15
4. 재기·재도전 기반 강화	19
III. 향후 추진계획	23

I. 추진배경

-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질적 고도화 및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'혁신성장' 전략을 추진
 -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구조와 체질에 근본적인 변화 (fundamental change)를 주어 성장잠재력 강화 도모
 - * 대통령 주재 「혁신성장 전략회의」(17.11.28)에서 ①민간 주도의 혁신성장, ②선도사업을 통한 가시적 성과창출 강조
 - 혁신성장 추진 및 성과도출을 위해 8대 핵심 선도사업*을 선정하고, 속도감 있는 정책수립·실행
 - * 초연결지능화, 드론, 미래자동차, 에너지산업, 핀테크, 스마트공장, 스마트팜, 스마트시티
- 금융위원회는 금융을 통해 기업·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'생산적 금융*' 추진
 - *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적·혁신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
→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
 - 기업이 손쉽게 창업하고, 성장과정에서 시행착오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지속성장 및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마련
 - 단편적인 지원대책 보다는 기업週期 전반에 걸쳐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접근하고,
 -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내심 있는 자본(patient capital)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회수·재투자되는 선순환체계 구축
 - 민간 창의와 자율이 적극 발휘되는 민간주도 금융생태계 조성
 - 정책별로 민간중심 추진체계,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재정과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 등을 통해 민간참여 촉진
 - 금융혁신과제 마련·집행 과정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수렴·반영

II. 기존 벤처·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평가

[전반] 자금공급 증가에 비해 민간참여는 부진

- 벤처·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벤처투자 규모는 사상 최대 규모

* 중기 대출잔액(조원) : ('13)487 → ('14)522 → ('15)577 → ('16)610 → ('17)655
VC 신규투자(조원) : ('14)1.6 → ('15)2.1 → ('16)2.2 → ('17)2.4

- 그러나 벤처·중소기업 금융이 재정·정책자금에 크게 의존하면서 민간시장의 참여는 저조

- 중기대출에서 정책보증 비중*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민간의 심사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

* GDP 대비 정책보증 비중('16년, %): (한국) 3.84, (미국) 0.16, (이탈리아) 0.99

- 벤처투자 영역에서도 재정·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아* 펀드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민간 투자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

* 벤처펀드 중 정책자금 비중('15년, %) : (미국) 12, (유럽) 21, (한국) 46

[창업] 창업의 양적증가에 비해 혁신성은 미흡

- 신설법인 수 등 창업 자체는 증가*하는 반면, 생계형 창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혁신형 창업은 상대적으로 저조

* '18.상 신설법인수 전년동기대비 6.8% 증가

** 창업목적별 비중('14, %) : (생계형) 63, (혁신형) 21, (승계형) 14

-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인이 창업경험·자금조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공간 등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

* 금융·비금융 창업지원이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, 공간지원 규모도 협소

※ 정부정책 선호도('17, %) : (창업공간지원) 27.6, (초기자금) 24.1

[성장] 혁신기업 성장단계에 자금공백 존재

- 창업초기 이후 대규모 성장자금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

구 분	창업초기단계		성장단계	
	엔젤/AC	초기VC	일반VC	PE
한 국	1억원 미만	5억원 미만	10~20억원	50억원 내외
외 국	Seeding	Series A	Series B	Series C
	5억원	50억원	150억원	320억원

- 동산자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, 자금조달 활용도는 낮은 상황

* 중소기업 자산 비중(%) : (동산) 38, (부동산) 25, (기타) 37
 담보대출 비중(%) : (동산) 0.07, (부동산) 93.9, (기타) 6.0

[회수] IPO 의존도가 높고, M&A 등 다양한 회수전략 부족

- M&A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글로벌 시장에 비해 IPO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

* 벤처투자 회수비중('16년, %) : (美) M&A 94 vs IPO 6, (韓) M&A 11 vs IPO 89

- 혁신기업 투자자금을 IPO를 통해 회수하기까지 장기간(13.1년, '16년기준)이 소요되며 코스닥시장의 활력도 저하

* 자금조달 규모(IPO+유증, 조원): ('99)4.5, ('00)7.1 → ('15)2.9, ('16)3.7, ('17)5.0

[재도전] 실패를 재도전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미흡

- 재도전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음*에도, 실패에 대한 낙인 효과 등 기업 재기·재도전의 저해요소가 존재

* 창업기업 생존율(%) : [1년차 (전체)59.8, (재도전)97.2, [5년차 (전체)30.9, (재도전)73.3

-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어려워지면서 자본시장 등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

참고

그간 혁신성장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

분 야	내 용	간담회명
전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벤처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나, 성장단계 별로 자금 공급의 불균형이 존재 ⇨ 생태계 전반에 충분한 자금이 골고루 공급될 필요(스타트업) · 신기술 분야 육성을 위해서는 재정과 정책자금의 과감한 위험부담을 통한 마중물 역할 수행 필요(학계) · 새로운 서비스 도입시 규제 리스크가 걸림돌로 작용 ⇨ 네거티브 규제 또는 테스트베드 운영 필요(스타트업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혁신성장 간담회 ('17.10.19, 역삼 마루180) · IF 2017 ('17.9.17, 신촌)
창 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교육지원, 컨설팅, 금융지원이 필요(스타트업) · 정부부처 별로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데, 일원화된 창구가 있으면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(스타트업) · 창업지원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으나,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집중 ⇨ 지역소재 창업인들에 대한 지원 인프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(청년 창업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IF 2017 ('17.9.17, 신촌) · 청년창업 간담회 ('17.12.4, 디캠프) · 청년희망 콘서트 ('18.6.20, 부산) · ('18.7.19, 목포)
성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족 ⇨ 대규모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(PE) · 재고자산 등의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, 금융권에서 동산담보대출을 축소하여 동산 활용에 제약이 존재 (시화공단 기업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혁신성장 간담회 ('17.10.19, 역삼 마루180) · 동산금융 활성화 현장 간담회 ('18.5.16, 시화)
회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코스닥 시장에 연기금,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 참여가 부족하여 시장활성화에 제약요소로 작용(PE) · 코스닥 상장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상장, 공시제도를 운영할 필요(VC, 벤처기업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혁신성장 간담회 ('17.10.19, 역삼 마루180)
재도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경우 기업인이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연대보증제도 개선 필요(스타트업) · 기업인 창업 및 재도전 기회 확대를 위해 시중은행권 에도 연대보증 폐지를 확산시킬 필요(중소기업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소벤처 간담회 ('17.8.30, 판교 테크노밸리) · 중소기업 간담회 ('18.5.28, 중소기업 중앙회)

Ⅲ.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추진현황

◇ 기업의 창업과 연속적인 성장에 자금이 적시 공급되고, 투자자금이 원활하게 회수, 재투자되는 금융생태계 조성

- 기업週期(창업-성장-회수-재도전)별로 빈틈 없이 충분한 규모의 자금이 공급되는 금융지원체계 구축
- 민간협업구조, 재정과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생태계에 민간참여 확대 유도

1 창업 >

>>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지속

- 1-① 핀테크분야 혁신창업 촉진
- 1-② 손쉬운 창업이 가능한 창업지원 인프라 마련
- 1-③ 스타트업 자금공급 확대

2 성장 >

>> 혁신기업의 성장(Scale-up) 지원 체계 마련

- 2-① 모험자본 공급기반 확충
- 2-② 다양한 동산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
- 2-③ 중견기업으로의 진입 및 중견기업 지속성장 촉진

3 회수 >

>> 회수시장 역동성 제고

- 3-① 코스닥시장 활성화
- 3-② 코넥스 상장요건 완화
- 3-③ M&A 및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

4 재도전 >

>> 재기·재도전 기반 강화

- 4-①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
- 4-② 재기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
- 4-③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

1.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지속

1-①

핀테크 분야 혁신창업 촉진

가. 핀테크 창업 활성화

(1) 주요 내용

-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을 허용하고 핀테크 생태계를 종합지원
 - 「금융혁신지원특별법」을 제정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을 허용하고, 법 제정 이전에 가능한 금융 테스트베드 본격 운영
 - 핀테크 산업 관련 투자·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하고,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를 강화
- 기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활용하여 자산관리·보험 등 기존 금융권 서비스를 고도화*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
 - * (자본시장) 비대면 거래 개선 등 (보험) 인슈테크 등
- 간편결제, 빅데이터,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하여 핀테크 시장을 확대

(2) 추진경과 및 실적

- 「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」(18.3월)을 통해 마스터플랜 제시
- '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확대 방안'(18.7월), 금융테스트베드 본격 시행(18.9월, 지정대리인 지정)

(3) 향후 추진계획

- 연내 「금융혁신지원특별법」 제정 추진
- 모바일결제 활성화 방안 마련(18년下)

나.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강화

(1) 주요 내용

- 금융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청년 창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
 -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·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
 -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하고,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시장 조성
 -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'기업CB'의 진입규제 완화 및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'My Data 서비스' 도입

(2) 추진경과 및 실적

- 「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」 발표('18.3월)
- 「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」('18.1월), 「금융분야 개인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」(5월), 「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」(7월) 등 세부 추진방안도 순차 발표

(3) 향후 추진계획

- 국민의 삶에 데이터기반 금융혁신이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상과과제를 담은 「신용정보법」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
- 개인 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등 법 개정 없이도 추진 가능한 과제는 관계부처·기관간 협의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

가.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

(1) 주요 내용

- 신보 마포사옥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·최대 규모*의 “청년 창업 기업 전문 보육공간” 조성 추진

* 국내 최초의 청년창업 전문 보육공간을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보육공간인 스테이션F(프랑스, 3.4만㎡(약 1만평))와 유사한 규모(3.6만㎡)로 조성

- 300개 청년기업에 대해 최장 3년 동안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, 교육, 컨설팅, 해외진출 등 쏠분야를 패키지*로 지원

* 창업기업 선별보육(민간 액셀러레이터VC) +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(정책금융기관 등) + 창업 강의·멘토링(대학대기업 등) + 핀테크 전문보육 프로그램(핀테크 지원센터)

- 핀테크, AI·블록체인 등에 대한 전문 보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

- 청년혁신타운을 중심으로 마포(창업공간)와 신촌(대학), 여의도(금융기관, 거래소 등)를 연결한 혁신창업 삼각 클러스터를 구축

(2) 추진경과 및 실적

- 「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」 발표('18.4월) 및 민간주도 관계 기관 합동 설립준비위원회 출범('18.7월)

- 「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」('18.8월)을 통해 마스터 플랜 제시 및 건물진단 등 리모델링 세부절차 착수

(3) 향후 추진계획

- '19.下, 청년혁신타운 입주기업 선발 및 일부시설* 개소 추진

* 개방형 공간인 1~5층 우선 개소 추진(라운지, 세미나실, 대강당 등)

- '20.5월, 마포 청년혁신타운 준공 및 전체 개소

나. 정책금융기관과 민간협업을 통한 창업보육 인프라 운영

(1) 주요 내용

- 정책금융기관과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협업을 통해 창업초기 기업에 보육 서비스 제공
 - (IBK 창공) 지점의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입주시키고 특화된 금융·비금융 서비스를 연계
 - * 체계적인 금융 서비스와 우수 액셀러레이터·VC 제휴를 통한 전문보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밀착형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 실현
 - (신보 NEST) 체계적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전담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여 액셀러레이팅, 보증·투자, 컨설팅 등을 복합지원
 - *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(New)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성(Expandability)을 갖춘 혁신 스타트업(Start-up)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, 비금융 복합 육성 플랫폼

(2) 추진경과 및 실적

- (IBK 창공) '17.11월 1호점을 개소하여 20개 스타트업이 입주, 금융지원*과 보육 등 비금융 서비스**를 병행하여 제공
 - * (대출) 5개 기업, 8억원, (투자) 4개 기업, 10억원
 - ** 경영 컨설팅(42회), 외부 전문가 멘토링 (35회), 외부 VC 초빙 모의 IR(21회)
- (신보 NEST) NEST 1~3기 180개팀이 액셀러레이팅 과정 수료 후 후속 지원*을 받고 있으며, 현재 4기 80개팀 선발
 - * 지원현황(억원) : 보증 413, 투자 32, 후속 민간투자 108 (크라우딩펀딩 8 포함)

(3) 향후 추진계획

- 정책금융기관의 보육공간 및 육성 업체수를 확대하여 혁신 기업의 성공적 창업을 견인할 계획
 - * '18.9월 IBK창공 2호점(구로) 개소 예정, '19년 중 지방 3호점 개소 예정
 - ** 연도별 신보NEST 운영계획 : ('17) 100개 → ('18) 160개 → ('19) 200개

가.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창업자금 공급 활성화

(1) 주요 내용

-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 추진
 - (발행기업 범위 확대) 발행기업을 업력과 무관하게 중소기업*으로 하고, 사행성 업종 등 外 모든 업종에 허용 (법령 개정중)
 - * (현행) 7년 內 창업기업 + 벤처기업, 기술·경영혁신기업
 - (개선) 중소기업. 단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제외
 - (발행한도 확대) 발행기업의 연간 자금조달 한도를 7억원 → 15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 (시행령 개정중)
 - (투자한도 확대)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발행인당 200만원 → 500만원, 연간 총 500만원 → 1,000만원으로 대폭 확대 ('18.4월 完)
 - (중개기관 업무범위 확대) 발행기업에 대한 중개기관의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하고,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 (법 개정중)
 - ※ 규제완화와 더불어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투자자 적합성테스트, 사업목적 등 중요사항 변경시 청약의사 재확인 의무 도입 등 균형감 있는 규제 개선 추진

(2) 추진경과 및 실적

-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 수, 펀딩 성공기업·성공률이 증가하는 등 클라우드 펀딩 저변 확대
 - * 투자자 수 : ('16.上) 2,685명 → ('18.上) 9,645명
 - 펀딩 성공기업, 성공률 : ('16.上) 58개 기업, 47.5% → ('18.上) 95개 기업, 73.1%

(3) 향후 추진계획

- 창업·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클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등의 조속한 개정 추진

나. 정책금융의 창업지원 금융 확대

(1) 주요 내용

- (보증) 담보능력이 취약한 창업기업이 사업안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

* 신보 신규보증액의 70% 이상을 업력 7년이내인 창업기업에 공급

- 보증비율·보증료 등을 우대한 창업기업 맞춤형 보증상품 공급

*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, 2030 Start-up 보증 등

- (대출) 창업기업(창업 7년 이내)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(신용대출, 어음할인 등)을 공급하고 우대금리 등의 혜택 부여

- 담보가 부족한 창업기업에 저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,000억원 규모의 「창업금융 3종 세트」 마련 ('17년, 기은)

- ① (스타트업) 창업 1년 이내, 금리인하(최대 $\Delta 2.0\%$ p) 및 이자유예(최장 1년)
- ② (창업초기) 창업 1~3년, 금리인하(최대 $\Delta 1.5\%$ p) 지원
- ③ (창업도약) 창업 3~7년, 도약기 중소기업 대상 금리인하(최대 $\Delta 1.0\%$ p) 지원

(2) 추진실적

- (보증) '17년중 창업기업에 15.4조원* 규모의 보증을 공급(신규 8.4조원 포함)하였고, '18년 7월까지 11.8조원 공급

*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5.4조원, 2030 Start-up 보증 235억원 등

- (대출) '17년중 창업기업에 19.1*조원, '18년 7월까지 15.7조원 공급

* 창업금융 3종 세트 939억원 포함

(3) 향후 추진계획

- '18년중 창업분야에 정책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별 창업기업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

* '18년 정책금융기관 창업기업 자금공급 목표(조원) : (신보) 15.0 (기은) 20.0

2. 혁신기업의 성장(Scale-up) 지원체계 마련

2-①

모험자본 공급기반 확충

가. 대규모 투자펀드(성장지원펀드) 조성

(1) 주요 내용

- 혁신기업 성장·회수 단계에 대한 투자기반 확충을 위한 대규모 모험자본 조성 추진(3년간 8조원)
 - 데스크벨리를 극복한 창업기업의 추가성장(scale-up)에 성장자금(growth capital)을 지원하는 대형펀드(500억원~5,000억원) 조성
 - 재정('18년 1,700억원)을 활용한 매칭재원 및 후순위출자 제공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적극적 유입 유도
- M&A, R&D, 사업재편, 설비투자 등 기업의 다양한 성장전략 지원을 위한 연계대출도 제공(4년간 20조원)

(2) 추진 경과 및 실적

- 「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」 발표('18.3.29) 이후 운용사 선정공고(3.30) 등의 절차를 거쳐 전문성 있는 민간운용사 선정 완료
 - * 6.22일 본예산 사업, 8.6일 추경사업 운용사 선정완료
- '18.6월, 펀드조성 착수[당초 계획(2.35조원)보다 확대된 3.07조원 예상]
 - * 8.29일 1호펀드(IMM, 3,550억원) 결성완료(연내 5,000억원으로 확대 예정)

(3) 향후 추진계획

- 결성이 완료된 펀드부터 순차적으로 투자집행에 착수하고 투자시점에 맞춰 연계대출 프로그램(4년간 20조원) 시행('18.9월)
- '19년 펀드조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*할 예정
 - * (예) '19.1월 중 운용사 선정공고 → 4월중 운용사 선정 완료 및 펀드조성 착수

나.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IR 플랫폼(산은 빅스트라운드) 운영

(1) 주요 내용

- 성장잠재력 있는 스타트업·벤처기업과 투자자 매칭을 지원하는 IR 플랫폼을 운영

* 액셀러레이터, VC, 창업지원기관 등 투자 전문기관을 파트너로 구성하여 유망기업 소개 및 투자자 연결

- 기업에게는 성장에 필요한 투자자금을, 투자자에게는 후속투자 유치, 투자금 회수 및 우량 투자처 발굴 기회를 제공
-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성장단계별(창업초기, 스타트업, 성장벤처) 및 분야별(바이오 등)로 특화된 IR 진행(주 3회)

(2) 추진 경과 및 실적

- '16.8월 출범 이후 179회 라운드를 통해 606개 기업의 IR을 실시, 118개 기업이 5,484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

* 연도별 IR 횟수 및 참여기업(회, 개) : ('16) 25/90, ('17) 75/282, ('18.8) 79/234

- 그간 운영경험을 토대로 '18년중 해외 및 지방*에서 IR 개최

* '18.5월 심천, '18.6월 부산, '18.7월 목포

(3) 향후 추진계획

- 지역 소재 스타트업에 수도권 투자자의 투자유치와 네트워크 확대 기회 제공을 위해 지방에서 정례적 개최
- 해외의 선진 VC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

(1) 주요 내용

- 동산담보 취급 확대를 위한 '평가-관리-회수' 인프라를 조성하고 담보안정성 제고, 대상자산 확대 등 법령·제도 정비
 - ①정확한 자산평가, ②신기술 기반의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 마련 ③안정적 회수시장 조성 등 단계적 인프라 구축

- ① 감정평가 내실화, 동산담보 데이터 축적을 위한 '은행권 공동 DB 구축' 등
 - ② IoT 기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,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
 - ③ 사적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, 매각인프라 고도화 등
 - 부동산 담보 등과 형평을 맞춰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'동산담보법'을 개정하고, 보다 폭넓은 동산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은행권 자율규제 전면 개편
 - 기업에게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저금리, 높은한도 대출·보증을 지원하고 은행에게 특별온렌딩 제공 등 취급유인 부여

(2) 추진 경과 및 실적

- 법령·제도개선 과제 중 법률개정이 불요한 과제는 旣 완료
 - * ①제3자 등기부등본 열람 ②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허용(대법원 규칙 개정完)
- 은행권 자율규제 개편(6.29일, 「동산담보대출 표준내규」)
 - * 동산담보 이용기업, 담보대상, 취급가능상품 범위를 은행권에 자율 위임
- 정책금융 지원체계 구축(기은 특별대출(5월), 신보 특례보증(6월))

(3) 향후 추진계획

- 동산담보법 개정('18.下 개정안 국회제출) 등 旣발표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, 신규·보완과제* 발굴 및 대책마련 추진
 - * 지식재산금융 종합계획(금융위·특허청), 미래수익성·영업력 등에 기반한 기업 대출 활성화 방안 등

(1) 주요 내용

-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(예비 중견기업) 및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 및 혁신동력 확충 지원
 - 중소·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개별기업의 **Scale-up** 전략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*(금융·비금융) 제공
 - * (산은 글로벌 챌린저스 200) 5년간 200개 중소·중견기업을 선정 → 2.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, 경영지원 및 유관기관(KOTRA, KIAT 등) 연계 프로그램 등
 - 스타트업 투자·M&A 등을 통해 지역 중견기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는 투자펀드 조성(산은,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)
 - * (산은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) 지역 운용사를 중심으로 지역소재 중견기업이 참여하여 스타트업 투자, 사업협력을 병행하는 벤처투자펀드

(2) 추진 경과 및 실적

- (글로벌 챌린저스 200) '18.3월, 프로그램 시행 공고 이후 '18.7월, '18년 지원대상 60개 기업 선정 및 지원* 착수
 - * 특별자금 제공, 전담 컨설턴트 지정, M&A·채권발행 등 특정분야 전문가문단 구성
- (오픈 이노베이션 펀드) 부산·경남 등 동남권 지역소재 15개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1호펀드 투자 진행*(17.9월 413억원 결성완료)
 - * 펀드 결성 이후 111억원 既투자 및 '18년중 55억원 추가투자 예정

(3) 향후 추진계획

-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마련
- '18년 하반기 중 지역 중견기업, 지역VC 등이 참여하는 투자 펀드 추가조성 추진(예. 경북 또는 호남 등 他지역으로 확대)

3. 회수시장 자금순환의 역동성 제고

3-①

코스닥시장 활성화

가. 코스닥시장 혁신

(1) 주요 내용

- 코스닥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 및 금융·세제 지원 재정비
 -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코스닥 상장요건 전면 개편
 - * ① 계속사업이익요건 등 혁신기업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요건 폐지
 - ② 혁신기업 맞춤형 상장요건 신설(세전이익·시가총액·자기자본 충족시 상장가능)
 -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유도* 및 저평가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「코스닥 Scale-up 펀드」 조성(3,000억원)
 - *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(現 0.3%) 면제('19년~) 등

(2) 추진 경과 및 실적

- 「코스닥 활성화 방안」 발표('18.1월) 이후 증권거래세 면제 시행('18.1월),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('18.4월) 등 후속조치 추진
- 금년 상장예정 법인이 최대 88개로 '16~'17년 대비 증가 예상
 - * 코스닥 신규 IPO 수 : ('16) 70개, ('17) 78개, ('18 예상) 88개

(3) 향후 추진계획

- 비상장 중소·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을 보완한 「자본시장 개혁과제」 마련(연내)
 - * ①중소·벤처기업 자금조달 활성화, ②혁신기업 발굴·성장을 위한 IPO 혁신, ③규제혁신을 통한 금융투자산업 역동성 제고방안
- 코스닥 Scale-up 펀드는 10월중 결성완료 및 본격적인 투자 착수

나. 코스닥 벤처펀드 조성

(1) 주요 내용

-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(투자금의 10%) 혜택을 부여하는 「코스닥 벤처펀드」 도입('18.4.)
- ① 운용규제 완화, ② 공모주 우선배정, ③ 소득공제 등을 통해 민간 운용사·투자자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기반 마련

- ① 벤처기업 신주 50% →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졸업 7년 이내 코스닥 상장사에 50% 이상 투자 (15% 이상은 벤처기업 신주투자)
- ② 코스닥 기업 투자비중이 50%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 30%를 우선 배정
- ③ 1인당 투자금액의 3천만원까지 10% 소득공제 혜택 부여

(2) 추진 경과 및 실적

- 4.5일 출시 이후 출시 4개월 만에 3조원 수준 펀드판매

* 1조 돌파 기간 : (하이일드) 4개월, (해외비과세 펀드) 10개월

* 월별 자금유입 추이(억원, 누적) : ('18.4.5일) 3,708, ('18.4말) 21,474, ('18.5말) 27,655 ('18.6말) 29,412, ('18.7말) 29,853

- 코스닥·벤처기업에 1.5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 코스닥 시장 등에 신규 유동성 공급

*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현황(조원, '18.7말 기준)

: (코스닥 주식) 0.75, (코스닥 CB 등) 0.4 (벤처 투자) 0.35, (기타) 1.2

(3) 향후 추진계획

- 코스닥 벤처펀드의 안착을 위해 신주 의무투자기간(現 6개월) 등 제도 보완 사안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추진

(1) 주요 내용

- 초기 중소·벤처기업의 코넥스 시장진입 기회 확대,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를 통한 성장사다리 체계 강화
 - 코넥스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요건(기관투자자 지분보유 비율·보유 기간*) 완화 및 지정기관투자자 요건** 대폭 완화
 - * (현행) 지분율 20%, 1년이상 보유 → (개선) 10%, 6개월이상
 - ** (현행)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300억원 이상 → (개선) 150억원
 - 코넥스 상장기업이 성장성과 기술력을 축적하여 성공적으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신속이전상장 요건 완화*
 - * 당기순익 40억원 이상 등 → 20억원 이상 등, 성장성 요건 추가 등

(2) 추진 경과 및 실적

- 「코넥스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*」(17.4월) 발표
 - * 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, 소액공모 한도 확대, 신속이전상장 요건 정비 등
- 코넥스 시장은 '13.7월 개설 이후 상장기업수, 시가총액, 자금 조달 등 측면에서 크게 확대
 - * [상장기업수] (13.7월) 21개 → (18.7월말) 152개, [시가총액] (13.7월) 0.5조원 → (18.7월말) 6.7조원, [자금조달] 7,106억원(18.7월말 기준, 누적)

(3) 향후 추진계획

- “금융투자업 규제 상시개선체계*” 등을 통해 추가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·개선 추진
 - *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규제 발굴 및 개선

(1) 주요 내용

- 정책금융기관(산은·성장금융) 출자사업을 통해 M&A, 세컨더리 시장 확대를 위한 회수지원 펀드 조성

* '18년 성장지원펀드는 운용사가 M&A 등 투자전략을 자율제안

- 정책금융기관 출자사업 펀드의 M&A, 세컨더리 분야 거래 활성화 유도
 - (M&A) 성장지원펀드 운용사에 M&A 지원 실적과 연동하여 추가 수익 인센티브 부여
 - (세컨더리) 운용사 동의가 있는 경우 LP지분 거래가 가능하도록 펀드 규약을 개정(LP 동의 불필요)

(2) 추진 경과 및 실적

- '17년 1.4조원 규모의 회수지원펀드를 조성하여(M&A 1.17조원, 세컨더리 0.21조원), 1,914억원 투자 집행(M&A 0.15조원, 세컨더리 418억원)

* '18년에는 성장지원펀드 운용사 선정시 M&A, 세컨더리 등에 중점 투자하는 4개 운용사 선정(M&A 1.45조원, 세컨더리 0.1조원)

- 18개 성장지원펀드 운용사중 10개사가 'M&A 회수 실적'에 연동한 추가수익 인센티브를 선택

(3) 향후 추진계획

- 회수지원펀드를 통한 M&A, 세컨더리 거래 실적을 보아가며, 필요시 추가 펀드조성, 제도개선 등을 검토

4. 재기·재도전 기반 강화

4-①

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

(1) 주요 내용

- 공공기관(신기보, 중진공, 지신보) 대출·보증(신규·증액분)에 대해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을 폐지
 - 은행권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(15%)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
 -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체계*를 마련·시행
- * (창업기업) 신규 자금공급 규모 유지, 창업기업 특성을 반영한 보증심사 기준 (일시적 유동성위기 기업) 상환유예, 신규자금 공급 등 지원

(2) 추진 경과 및 실적

- 「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안」 발표 및 보증기관-은행권 MOU 체결('18.3월)
 - '18.4.2일 시행 이후, 창업기업 신규자금 등에 연대보증이 면제된 8.4조원*이 공급되고 있어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모습
- * '18.7월말 기준, 신보·기보·중진공의 신규·증액 공급액

(3) 향후 추진계획

- 책임경영심사*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법인대표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실 발생을 최소화
- * 보증지원시 법인대표자-공공기관 간 「투명경영이행 약정」 체결 등
- '18.8월부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의 既대출·보증 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*
- * 연간 既보증잔액의 평균 20%에 해당하는 기업수를 대상으로 폐지 추진

(1) 주요 내용

□ 성실실패 기업인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, 성공의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창업·재기지원 활성화

① 다중채무자 재창업 지원 절차를 간소화(소요기간 : 2개월 → 1개월) 하고, 보증비율* 및 지원기관 확대** 등 신규자금 지원 강화

* (보증비율 확대) 보증비율을 50% → 80%(신·기보 각각 40%)까지 확대

* (지원기관 확대) 중진공 → 중진공·기은으로 확대

② 신·기보 단독채무자의 재기지원에 대해 기존채무 원금감면 범위를 다중채무자와 동일하게 최대 75%까지 확대

< 재창업·재기자금 지원 >

구 분	정책금융기관 재창업지원	신보 재도전지원 프로그램
지원대상	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은 다중채무자 중 재창업자	신보 단독채무자 중 재기의지가 있는자
지원내용	중진공 신규자금 대출 * 신·기보 각 40%씩 총 80% 보증	기존채무 원금감면(최대 75%) 및 신규자금 보증지원

(2) 추진 경과 및 실적

□ 재창업·재기지원 강화('17.4월) 이후 자금지원이 증가

* 신·기보 보증을 통한 재창업·재기자금 대출실적(억원) :

'16년 217억원 → '17년 348억원 → '18.6월 189억원

(3) 향후 추진계획

□ 재창업 기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

가.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·운영

(1) 주요 내용

- 자본시장 중심으로 중소·중견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
 - 기업구조혁신펀드는 8개 은행*, 캄코, 성장금융 출자와 민간 자금을 매칭하여(민간자금 50% 이상) 1조원 이상의 펀드 운용
 - * 산은, 수은, 기은, 우리, NH농협, KEB하나, 국민, 신한
 -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주로 중견·중소기업* 구조조정에 투자
 - * 기간·전략산업의 경우에는 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(자율협약·워크아웃) 수행

(2) 추진 경과 및 실적

- 8개 은행, 캄코, 성장금융의 5,000억원 출자 MOU체결('17.12월)
- 8개 은행 등 주요 출자기관 출자계약 체결 완료 및 운용사 선정절차 진행('18.8월)

(3) 향후 추진계획

- 운용사 선정 및 민간출자자 모집 등을 거쳐 '18년 4분기 중 투자 개시
- 향후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경험축적 및 시장규모 등을 보아가며, 추가조성 필요시 출자기관과 펀드확대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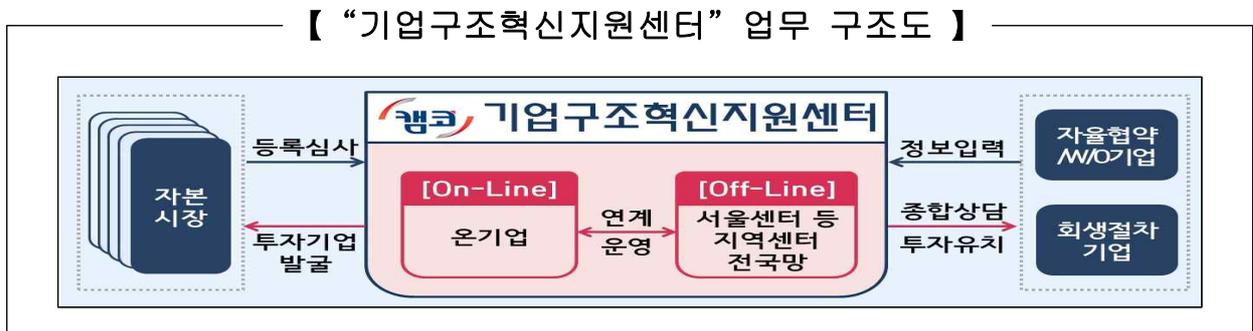
나.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설치·운영

(1) 주요 내용

- 기업과 자본시장의 투자자 정보를 모아 기업에겐 투자 유치를, 투자자에겐 투자처 발굴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플랫폼* 운영

* 캠프 지역본부내 ① 전국 27개의 오프라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②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투자매칭을 지원하는 온라인 정보 플랫폼(온기업)을 구축

- 투자 매칭과 함께, ① 캠프가 신규 운영자금·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(S&LB)을 지원하고, ②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안내



(2) 추진 경과 및 실적

- 전국 기업구조혁신센터(27개) 개소 및 온기업 사이트 오픈('18.4월)
 - 17개 투자자와 148개 기업이 가입하여 투자 협의 및 재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·안내 진행('18.7월)

(3) 향후 추진계획

- 투자자 등의 회생기업에 대한 정보 취득 및 일괄 구조조정이 용이하도록 캠프를 통한 회생기업 채권 집중화* 추진(연내)

* 금융공공기관·국책은행 채권결집 →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기업정보 전달 및 채권공급

IV. 향후 추진계획

① 혁신성장 금융생태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

○ 제도시행 이후 관련동향*을 면밀히 점검하고 既발표된 일정에 따라 후속조치**를 추진하여 현장에서의 안착 유도

*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공급, 코스닥시장 상장 및 코스닥벤처펀드 조성추이 등

** 既보증기업 연대보증의 단계적 폐지, 동산담보법 개정, 금융혁신특별법 제정

② 민간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감참여 확대 유도

○ 민간과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시장참가자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참여구조*, 인센티브** 등을 적극 활용

* (청년혁신타운) 설립준비위원회에 민간전문 보유기관 참여

(성장지원펀드) 펀드운영위원회에 산업, 경제, 이공계 분야 전문가 참여

** [기업구조혁신펀드] (운용사) 추가 성과보수 (민간출자자) 후순위출자

○ 정책수요자* 및 지역별** 금융현장 릴레이 행보를 통해 민간 전문가 및 금융이용자들의 현장 의견 수렴

* (예) 연대보증 폐지 관련 간담회, 은행권 동산금융 활성화 간담회 등

** (예) 지역 청년창업 간담회 및 지역 스타트업 IR 등

③ 정책집행 과정에서 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노력도 지속

○ 既발표과제와 연계하여 신규·보완과제 발굴 및 대책 마련

* (예) 동산금융 활성화 → 지적재산금융 종합계획,

코스닥시장 혁신 → IPO 혁신 등 자본시장 개혁과제

○ 정책자금의 경우, 단순한 집행실적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자금공급효과를 검증·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